

사단법인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

창립 발대식 및 제1회 학술세미나

소방·재난, 행정이 먼저 움직인다

AI로 더 신속하게, 더 정확하게

2026. 9. 18.(금) 14:00

원주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

주최



주관



소방청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주민자치학회

사단법인 한국지방의회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LOCAL COUNCIL STUDIES

사단법인
한국지방계약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후원



행정안전부



원주시

목차

순	내용	집필·참여	쪽
환영사·축사			
1	환영사	박기관	2
2	축사	김성호	3
3	축사	김광용	4
4	축사	최용철	5
5	축사	구자열	6
6	축사	문정환	7
7	축사	육동일	8
8	축사	박상희	9
9	축사	전상직	10
10	축사	이향수	11
11	축사	성시경	12
행사 안내			
12	행사 개요	사무국	13
13	프로그램	사무국	14
14	발표자와 토론자	사무국	15-17
학술발표			
15	기조강연·기후변화와 국가재난관리체계 방향	황범순	18-32
16	발제 1·소방·재난, 행정이 먼저 움직인다. AI로 더 신속하게, 더 정확하게	박기관	33-48
17	발제 2·재난위기 시대, 소방 조직의 과제와 전망	이인중	49-54
종합토론·학회 소개			
18	종합토론	좌장·토론자	55
19	학회 소개	사무국	56
20	판권	사무국	57

환영사

박기관

사단법인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장



불이 나고, 물이 차오르고, 사람이 갑니다.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논의가 아니라 더 빠른 판단입니다. 지난해 봄 경남 산청의 산불은 주불을 잡기까지 213시간이 걸렸습니다. 대책이 없어서 겪은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큰 재난이 있을 때마다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이미 2023년에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국가의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문서가 없어서가 아니라 구조가 그대로여서 되풀이된 일입니다.

관측은 정밀해졌고 예측은 빨라졌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놓치는 신호를 먼저 읽어 냅니다. 그런데도 그 성능이 현장의 속도로 바뀌기까지는 여전히 오래 걸립니다. 도입을 정하고, 예산을 세우고, 규정을 고치고, 사람이 익히는 일이 그 사이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늦추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와 절차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는 그 병목을 연구하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기술을 만드는 단체가 아니라 행정을 연구하는 학술단체입니다. 학회의 이름에 소방을 앞세운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큰 말 안에 소방을 묻어 두면, 가장 먼저 현장에 닿는 조직이 무엇에 걸쳐 있는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불 앞에 두 개의 지휘부가 서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로는 어떤 좋은 기술도 제 몫을 하기 어렵습니다.

학회가 하려는 일은 셋입니다. 첫째, 정보가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지휘와 조직의 구조를 실증으로 규명하겠습니다. 둘째, 권한과 책임을 어디에 어떻게 둘 것인지 기능 배분의 설계를 연구하겠습니다. 셋째,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행정 과정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도구를 잘 손이 준비되지 않으면 도구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책임을 사람에게 묻는 대신 구조에 묻는 것, 그것이 행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자리를 원주에서 엽니다. 교통과 안전을 다루는 국가기관과 지방행정을 오래 연구해 온 기관이 이 도시에 함께 있고, 지방정부가 인공지능을 행정에 들이는 실험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중앙이 설계한 것을 지역이 받아 쓰는 순서가 아니라, 지역에서 작동한 것을 국가가 배우는 순서를 이 도에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연구가 논문에 머물지 않으려면 시험해 볼 곳이 필요하고, 원주가 그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소방청을 비롯한 일곱 기관이 주관으로 함께해 주셨고, 행정안전부와 원주시가 후원해 주셨습니다. 기조강연과 발제, 토론을 맡아 주신 분들, 그리고 먼 길을 걸어 이 자리를 채워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난 제도를 다루는 쪽과 재난 현장을 지키는 쪽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는 자리, 학회를 준비하며 가장 먼저 만들고 싶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의 논의를 기록으로 남겨 다음 논의의 출발선으로 삼겠습니다.

학회가 내놓을 연구는 화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한과 예산, 자료와 절차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정이 먼저 움직이면 현장은 더 신속해지고 더 정확해집니다. 그 한 문장을 증명하는 데 학회의 힘을 쓰겠습니다. 창립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질정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9월 18일

사단법인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장 박기관

축사

김성호

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존경하는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의 창립 발대식과 제1회 학술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기관 회장님과 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 업무를 맡아 일하면서 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마련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위험을 조금이라도 먼저 알아차리고, 필요한 정보를 제때 나누며, 담당 기관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재임하던 때에도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는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기관마다 나뉘어 있던 정보를 함께 활용하고, 현장의 경험에 과학기술을 더해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때 고민했던 과제들을 풀어 갈 기술의 가능성이 이제 한층 넓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의 변화에도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마음을 쏟았던 재난안전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행정의 역할을 함께 논의하는 오늘의 자리를 맞으니 감개무량합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한다고 안전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을 알려 주는 정보가 있어도 기관 사이에서 멈추거나 현장의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국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정보를 함께 쓰는 체계, 분명한 역할과 책임, 현장을 뒷받침하는 인력과 예산이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살피고,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도 행정의 몫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방·재난, 행정이 먼저 움직인다. AI로 더 신속하게, 더 정확하게’라는 이번 학술세미나의 주제에 깊이 공감합니다. 재난이 발생한 뒤의 대응만큼이나, 위험을 미리 찾아 줄이고 현장이 움직일 여건을 먼저 갖추는 행정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때 기술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가 연구와 현장을 잇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연구의 출발점이 되고, 연구의 성과가 제도와 업무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비록 공직의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까지 내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현장과 행정에서 쌓아 온 경험을 나누고, 후배 여러분의 노력에 힘을 보태며, 앞으로도 국가 재난안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회의 뜻깊은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

축사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입니다.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회 출범을 위해 정성을 모아주신 박기관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방·재난 행정의 발전을 위해 지혜를 보태주시는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 관계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기후위기로 재난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워질수록, 위험 신호를 먼저 포착하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소방과 재난,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모아 현장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자 하는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의 출범은 매우 뜻깊습니다. 학회의 연구와 논의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행사의 주제인 “소방·재난, 행정이 먼저 움직인다. AI로 더 신속하게, 더 정확하게”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보여줍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한 상황판단을 돕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국민의 안전으로 이어지려면, 분석된 정보가 현장의 담당자에게 제때 전달되고 주민 대피와 구조·구급 등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절차, 기관 간 협력체계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소방·재난 행정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방기관과 학계를 잇는 협력의 중심점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도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기술과 연구 성과가 실효성 있는 재난안전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의 창립을 축하드리며, 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축사

최용철

소방청장



존경하는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의 뜻깊은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회 창립을 위해 애써주신 박기관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소방과 재난행정의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회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러나 재난현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대비해야 할 위험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경험과 학문의 전문성, 그리고 이를 정책과 제도로 구현하는 행정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연구의 의제로 만들고, 연구의 성과가 다시 정책과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새로운 기술이 실제 재난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의 기반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청도 현장의 목소리와 학계의 전문적인 연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학문이 현장을 이해하고, 현장이 정책을 움직이며, 정책의 변화가 다시 국민의 안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앞으로 소방청과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가 만들어갈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가 소방과 재난, 행정을 잇는 든든한 가교로서 대표적인 학술공동체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소방청장 최용철

축사

구자열

원주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주시장 구자열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첫걸음을 우리 원주에서 시작해 주신 박기관 학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전국에서 와주신 내빈 여러분을 원주시민과 함께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오늘 행사의 주제인 「소방과 재난, 행정이 먼저 움직인다」는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재난 앞에서 기술은 이미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기술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행정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행정의 최일선에 우리 기초지방정부가 있습니다.

원주시는 시민의 안전을 시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재난에 강한 도시는 사고가 없는 도시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서로 힘을 모으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교통체계와 현장 곳곳의 안전 인프라, 그리고 이를 하나로 연결하는 관계기관 간 협력까지, 정부와 함께 한 걸음씩 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현장의 경험이 학문으로 이어지고, 학문의 성과가 다시 제도와 현장을 바꾸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주시도 학회의 연구와 실증이 지역의 현장에서 활발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립을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원주시장 구자열

축사

문정환

원주시의회 의장



먼저,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의 뜻깊은 창립과 발대식을 원주시민, 그리고 원주시의회 의원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대형화·복잡화되는 사회재난 등 그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안전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소방과 재난 행정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가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소중한 결실이 있기까지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학회 설립을 이끌어주신 박기관 교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은 시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지방정부가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더라도,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재난의 위험을 완벽히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의 역할에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큼니다.

현장의 경험과 학문적 연구를 융합하여 대한민국 소방재난 행정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선제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든든한 싱크탱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주시의회 역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원주시’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학회의 귀중한 연구 성과와 제언들을 귀담아듣고, 원주시 재난안전 정책과 조례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의 창립과 발대식을 축하드리며, 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앞날에 늘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원주시의회 의장 문정환

축사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존경하는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육동일입니다.

먼저 사단법인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의 창립과 제1회 학술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뜻깊은 출발을 이끌어 주신 박기관 초대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관계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학회의 첫걸음을 함께해 주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방기관, 학계와 현장 전문가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기상과 대형·복합재난이 빈번해지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재난의 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만큼, 사후 대응을 넘어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과 대비를 강화하는 재난관리체계로의 발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학술세미나의 주제인 「소방·재난, 행정이 먼저 움직인다. AI로 더 신속하게, 더 정확하게」는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위험을 먼저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은 앞으로 재난안전 행정이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입니다.

특히 재난은 지역과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지역마다 재난의 유형과 여건이 다른 만큼,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지역의 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방기관, 학계와 현장이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는 촘촘한 재난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번 학회가 이러한 주체들을 연결하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정책과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주민중심·지방주도·현장중시」의 연구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 지방정부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의 창립과 제1회 학술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육동일

축사

박상희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

건국대학교 총동문회장 · 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 박상희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의 창립과 제1회 학술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기관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소방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을 연구하고 정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중소기업 현장에서 일해 왔습니다. 지금은 한국농어촌희망재단에서 농어촌의 인재를 키우고, 기업과 농어촌이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분야는 달라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같습니다. 하는 일이 현장에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기업인이 일터를 지키고, 청년이 지역에서 미래를 준비하려면 그 바탕에 안전이 있어야 합니다. 재난으로 일터와 삶의 터전을 잃으면 다시 일어서는 데 많은 시간과 힘이 듭니다. 피해를 입은 뒤 돕는 일과 함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주제인 「소방·재난, 행정이 먼저 움직인다. AI로 더 신속하게, 더 정확하게」도 이러한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위험을 먼저 알아내고, 필요한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농어촌의 작은 마을이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도 그 혜택이 닿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 기술을 현장에서 쉽게 쓰게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위험을 알리는 정보가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제도와 기술의 가치는 결국 사람들의 생활이 얼마나 안전해졌는가로 확인될 것입니다.

이 일은 어느 한 기관의 힘만으로 이루기 어렵습니다. 행정은 필요한 제도와 협력의 틀을 갖추고, 학계는 현장의 문제를 살펴 해법을 제시하며, 기업은 기술과 경험을 보탬 수 있습니다. 서로 가진 힘을 연결하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가 바로 그런 만남의 자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듣고, 연구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다시 살피는 학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농어촌과 지역의 일터에까지 이어진다면 학회 창립의 뜻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학회의 발전과 함께하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 박상희

축사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 회장



사단법인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의 창립과 제1회 학술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출발을 준비하신 박기관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소방공무원과 재난 행정 관계자, 연구자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주민자치의 출발이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이웃이 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이고, 마을의 일을 함께 의논하며,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일 가운데 안전보다 절실한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주민도 자신의 삶을 가꾸고 공동체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무겁습니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전문적인 행정과 현장의 경험이 긴밀하게 만나야 합니다. 비가 오면 어느 골목에 물이 고이는지, 대피할 때 어느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알게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필요한 곳에 전달되고 전문적인 판단과 연결될 때 우리 마을을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이번 학술세미나의 주제인 「소방·재난, 행정이 먼저 움직인다. AI로 더 신속하게, 더 정확하게」는 이러한 노력에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위험을 일찍 알아차리고 필요한 판단을 돕는 기술의 발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더하고 싶습니다. 그 정보가 주민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주민은 무엇을 이해하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빠른 안내라도 주민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도움을 요청할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생활 속 안전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어르신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안내하고, 이동이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한 지원이 닿도록 준비하며, 주민이 평소에 배우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은 안전 안내를 받는 사람이면서, 자기 마을의 안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입니다. 행정은 그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정보와 교육, 참여의 여건을 갖추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가 이러한 만남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소방과 재난 행정의 전문성, 기술을 연구하는 분들의 지혜, 주민이 축적한 생활의 경험을 함께 놓고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구의 성과가 현장에서 활용되고, 현장에서 만난 질문이 다시 연구로 이어진다면 학회의 학문적 성과도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웃을 살피는 마음과 전문적인 대응 역량이 함께 자랄 때 공동체의 안전도 단단해집니다. 오늘 원주에서 시작하는 이 뜻깊은 걸음이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온한 일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학회의 창립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한국주민자치학회 회장 **전상직**

축사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이향수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의 창립과 제1회 학술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출발을 준비해 주신 박기관 회장님과 창립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과 연구의 자리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의 주제인 “소방·재난, 행정이 먼저 움직인다”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저는 이 문장에 학회가 나아갈 방향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는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소방차와 구조대원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 신속한 출동 뒤에는 미리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위험을 살피는 예방체계, 필요한 인력과 장비, 기관 간 정보 공유, 그리고 지체 없이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입니다.

현장의 헌신이 온전히 힘을 발휘하려면, 행정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의 출범은 바로 그 준비를 학문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소중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에게 지방정부는 가장 가까운 정부이며, 안전은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주민은 위급한 순간에 어느 기관의 소관인지부터 묻지 않습니다. 지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가족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렇기에 소방과 재난행정은 기관별 업무의 경계를 넘어 주민의 삶을 중심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도시의 밀집된 주거지역과 산간의 흩어진 마을, 고령 주민이 많은 지역과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은 대비해야 할 위험도, 대응 방식도 다릅니다. 국가가 안전의 기본을 책임지는 가운데, 지역의 사정을 반영한 예방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함께 논의하는 AI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안전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기술이 찾아낸 위험신호가 현장의 판단과 조치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책임과 역할이 분명해야 합니다. 기술의 가능성을 주민의 안전으로 연결하는 일, 그것이 행정의 역할이자 학문이 기여해야 할 지점입니다.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가 현장의 경험을 연구의 질문으로 바꾸고, 연구의 성과를 실행 가능한 제도로 연결하는 학회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듣고, 기관과 학문 분야 사이의 벽을 낮추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도 주민의 안전과 지역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일에 학문적 교류와 협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학회의 첫걸음이 그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더욱 단단히 지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하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이향수**

축사

성시경

한국행정학회 회장



존경하는 박기관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 회장님과 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행정학회 회장 성시경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소방과 재난행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학문적·정책적 플랫폼인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회 창립을 위해 오랜 시간 애써 오신 박기관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재난은 과거와는 그 성격과 규모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산불, 도시화와 초고층화에 따른 복합재난, 감염병과 사회기반시설의 위험 등 재난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의 전문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방조직과 경찰,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통합적 재난관리체계와 거버넌스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방·재난 행정’은 우리 행정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연구영역입니다. 재난 대응의 성패는 좋은 장비와 기술뿐만 아니라 조직과 제도, 예산과 인력, 기관 간 협업,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체계에 의해 좌우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갖추고 있더라도 복잡한 절차와 기관 간 칸막이로 인해 현장에서 제때 활용되지 못한다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재난관리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 상당 부분은 행정의 문제이며, 동시에 행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인 「소방·재난, 행정이 먼저 움직인다. AI로 더 신속하게, 더 정확하게」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로봇기술은 재난을 예측하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며,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국민의 안전이 저절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며, 현장의 공무원과 소방관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행정적 역량과 제도적 기반이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성과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의 주체에 대한 고민도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오늘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의 출범은 이러한 문제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학과 소방·재난 분야의 학문적 경계를 넘어 정부, 지방자치단체, 현장기관과 전문가들이 함께 문제를 논의하는 열린 학술공동체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보훈 등의 수준을 높이고 소방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한 바 있습니다. 특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정 이후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한 바 있으며,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의 정책 개발의 과정에도 참여한 바 있기에 소방 재난 행정에 매우 익숙합니다.

한국행정학회는 올해로 창립 70주년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행정이 더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행정학회는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더 나은 행정체계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의 힘찬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나라 소방·재난행정 분야를 대표하는 학술공동체로 크게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한국행정학회 회장 성시경

행사 개요

행 사 명	사단법인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 창립 발대식 및 제1회 학술세미나
일 시	2026. 9. 18.(금) 14:00 ~ 18:00 (등록 13:30)
장 소	원주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
대 주 제	소방·재난, 행정이 먼저 움직인다. AI로 더 신속하게, 더 정확하게
주 최	사단법인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
주 관	소방청,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주민자치학회, 한국지방의회학회, 한국지방계약학회
후 원	행정안전부, 원주시
법인 현황	소방청 설립허가 2024. 11. 14. · 법인등록번호 110121-0141342 · 고유번호 629-82-00753

추진 목적

가. 소방·재난 행정의 선제성 강화

재난 발생 후 대응에 머물지 않고,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행정이 위험을 먼저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연결하는 정책방안을 논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정책과 전문지식의 연계

중앙정부와 소방기관, 학계와 현장 전문가가 한자리에서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재난안전 협력과제를 발굴합니다.

다. 시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

학술발표와 공개 토론을 통하여 안전 관련 지식과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지역의 안전기관·단체 간 지속 가능한 협력망을 구축합니다.

프로그램

시 각	구 분	내 용
13:30 ~ 14:00	등 록	등록 및 참석자 교류
14:00 ~ 15:00	1 부	창립 발대식. 환영사, 축사, 비전 선포
15:00 ~ 15:20	휴 식	휴식 및 기념촬영
15:20 ~ 17:40	2 부	제1회 학술세미나
17:40 ~ 18:00	폐 회	폐회
18:00 ~	3 부	참석자 간 교류

제1회 학술세미나 세부

사회는 김인성 제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은 김성호 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맡습니다.

시 각	구 분	제 목	발 표 자
15:20 ~ 15:22	영 상	「1968년생 기술」 상영 및 장내 전환	-
15:22 ~ 15:45	기조강연	기후변화와 국가재난관리체계 방향	황범순
15:45 ~ 16:05	발제 1	소방·재난, 행정이 먼저 움직인다. AI로 더 신속하게, 더 정확하게	박기관
16:05 ~ 16:25	발제 2	재난위기 시대, 소방 조직의 과제와 전망	이인중
16:25 ~ 16:35	휴 식		
16:35 ~ 17:35	종합토론	기조강연자와 발제자, 토론자 4인이 함께 참여합니다	좌장 김성호
17:35 ~ 17:40	정 리	논의 정리	좌장

발표자와 토론자



좌 장

김성호

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행정안전부 선거의뢰과장·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역임
- 강원도 기획조정실장·행정부지사 역임
- 행정안전부 대변인·재난관리실장 역임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역임



기조강연

황범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국장

- 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장 역임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장 역임
- 경기도 혁신산업정책관·의정부시 부시장 역임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국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 역임
- 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국장

기후변화와 국가재난관리체계 방향



발제 1

박기관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 회장

- 건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제25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역임
-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 교환교수 역임
- 마르퀴스 후즈 후 인 더 월드 등재
- 대통령 직속 제1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지방분권분과위원장 역임
- 기획재정부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 역임
- 상지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총장 직무대행 역임
- 지방분권·균형발전 공로 홍조근정훈장 수훈
- 현 사단법인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상지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교수

소방·재난, 행정이 먼저 움직인다. AI로 더 신속하게, 더 정확하게



발제 2

이인중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고양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공직 입문
-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국민안전처 119구조과 근무
- 대통령비서실 국가위기관리센터·소방청 화재예방과·운영지원과 인사계 근무
- 영주소방서장·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소방정 역임
- 현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소방정)

재난위기 시대, 소방 조직의 과제와 전망



토 론

김흥배

원주시 안전교통국장

- 제28대 원주시 우산동장 역임
- 원주역사박물관장 역임
-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역임
- 원주시 투자유치과장 역임
- 현 원주시 안전교통국장



토 론

최지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 지방자치·자치분권·정부 간 관계 및 행정체제 개편 분야 연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자치분권·지방행정 정책연구 수행
-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권고안 연구진·5극3특 연구추진단장 역임
- 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
- 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촉위원



토 론

박종혁

한경대학교 교수

- 지방정책·자치분권·지방의회 교육·정책평가 분야에서 연구·교육 활동
- 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부장·부원장·원장 직무대행 역임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역임
- 국회 지방자치·분권 입법 방향 토론회 등 지방정책 관련 발표·토론 참여
- 현 한경대학교 교수



토 론

전용한

상지대학교 소방공학과 교수

- 열전달·터널화재·유동해석 분야 연구
- 한국화재소방학회 산불방재분과 위원장
- 소방청 자체평가위원
- 현 원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
- 현 상지대학교 소방공학과 교수

* 약력은 2026. 8. 29. 기준이며, 현직과 주요 보직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2026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 창립 발대식 및 제1회 학술세미나

기조강연

기후변화와 국가재난관리체계 방향

2026. 9. 18. 원주시청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국장

황범순

슬라이드 2 / 29

기후변화와 국가재난관리체계 방향



행정안전부

목차

전 29장

구분	제목	내용	장수
I	재난, 무엇이 달라졌는가	정의, 원인 이론, 기후변화	9
II	국가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재난관리 4단계, 관리기구와 계선, 제도 변천	5
III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	추진배경, 3대 추진전략	5
IV	2026년 재난관리 추진계획	생명존중사회, 대응역량 제고	7
V	맺음	마무리	1

2 / 29

I

재난, 무엇이 달라졌는가

재난의 정의는 셋이고, 재난을 보는 눈은 네 번 바뀌었습니다. 기후는 그 눈이 감당하던 조건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I. 재난, 무엇이 달라졌는가 1. 재난의 정의

재난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 정의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국제기구

유엔 재난위험감시기구

공동체나 사회의 기능이 심각하게 붕괴되는 현상

국어

표준국어대사전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

제3조제1호 가목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제3조제1호 나목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 UN-DRR 용어집 / 표준국어대사전

1. 재난, 무엇이 달라졌는가 2. 재난 원인 이론



위험은 관리의 대상이고, 징후는 먼저 나타납니다

네 가지 이론

U. Beck

위험사회

과학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위험을 낳고, 그 위험은 일상적으로 출현합니다

C. Perrow

정상사고론

안전장치를 아무리 늘려도 피할 수 없는 정상사고가 존재합니다

H. Heinrich, 1931

하인리히 법칙, 1 대 29 대 300

한 건의 큰 사고 앞에는 29건의 작은 사고와 300건의 징후가 있습니다

J. Reason, 1990

스위스 치즈 이론

여러 겹 방어막의 구멍이 한 줄로 정렬되는 순간 사고가 관통합니다

※ U. Beck, World Risk Society(1999) / C. Perrow, Normal Accidents(1984) / H. Heinrich(1931) / J. Reason(1990)

5 /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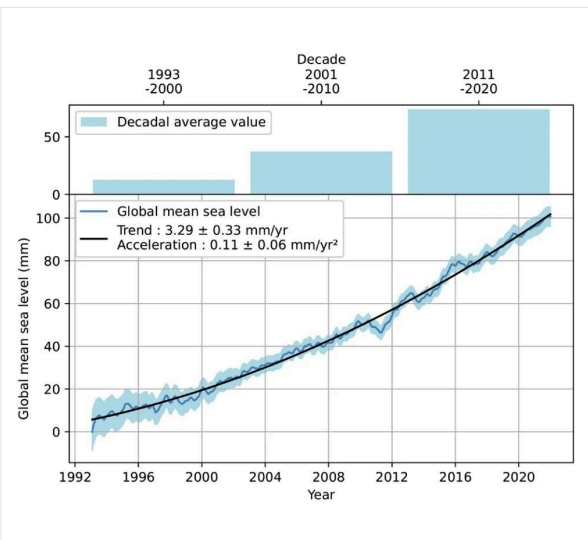
슬라이드 6 / 29

1. 재난, 무엇이 달라졌는가 3. 기후변화의 추이



기후변화의 추이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WMO, 기상청



전 지구

1.1도

2011~2020년 지표면 온도 상승폭(기준 1850~1900년)

1.5도

가까운 시일 내 도달이 추정되는 온난화 수준

4.5mm

2011~2020년 연평균 해수면 상승. 2001~2010년은 2.9mm

국내

54일

2020년 중부 장마. 평년 32일의 1.7배

역대 1위

2023년 강수강도. 1973년 이후

30.1일

2024년 폭염일수. 역대야 24.5일 역대 1위

전 지구 평균 해수면 추이(WMO, The Global Climate 2011-2020)

※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 2023 / WMO, The Global Climate 2011-2020 / 기상청 기후분석 및 관측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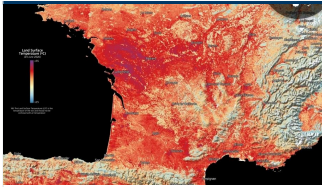
6 / 29

I. 재난, 무엇이 달라졌는가 4. 국제 피해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 피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유럽, 2022년과 2026년

폭염

2022. 7. 포르투갈 47.0도(7월 기준)·초과사망 1,063명(잠정), 영국 사상 첫 40도

2026년 여름 서유럽 6~7월 평년 대비 +2.79도, 8개국 3만 명 이상 (AFP 집계, 잠정)

영상: European Union, Copernicus Sentinel-3 지표면온도(2026. 6. 23.) / IPMA·DGS·영국 기상청·코페르니쿠스·AF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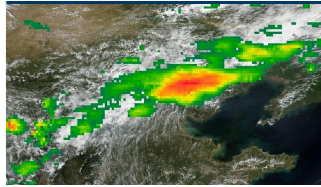


미국 텍사스, 2025. 7.

극한호우

7. 4. 극한호우와 급류 홍수, 130명 이상 사망

사진: 미국 해안경비대(USCG), DVIDS, 퍼블릭 도메인 /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 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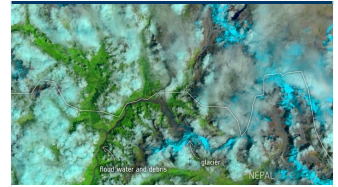


중국 베이징, 2025. 7.

폭우

7. 26.~29. 폭우, 30명 이상 사망

영상: NASA Worldview(NOAA-20 VIIRS·GPM IMERG 강수, 2025. 7. 27.), 퍼블릭 도메인 /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 1쪽



네팔, 2026. 8. 26.

암반·빙하 붕괴 대홍수

랑탕리롱 암반·빙하 붕괴(ice-rock avalanche), 트리슈리·나라야니강 유역

사망 1,252명·연락두절 4,216명 (NDRRMA 9. 3. 정오 기준, 잠정), 9. 1. 해외긴급구호대 44명 파견

영상: ESA, contains modified Copernicus Sentinel data (2026) and Landsat-9 data, CC BY 4.0 / NDRRMA-UN News

※ 수치 출처는 각 카드 표기 / 사진·영상은 표기된 기관의 공개 저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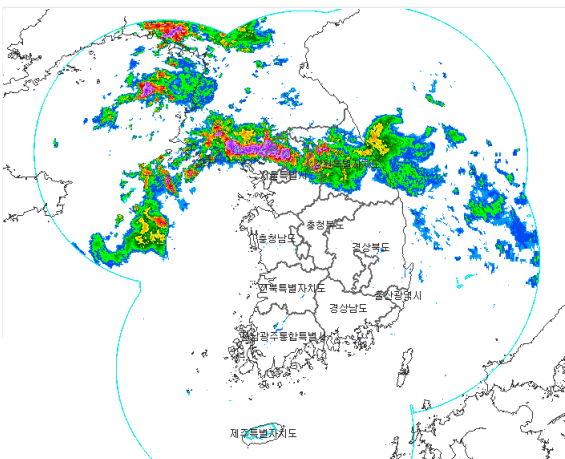
7 / 29

I. 재난, 무엇이 달라졌는가 5. 호우의 기록



정체전선이 만든 호우의 기록

2025년과 2026년



시기	기록
2025. 7.	산청 7. 19. 산사태, 사망 14명·실종 1명. 시천 누적 793.5mm 가평 7. 20. 사망 7명. 1시간 최다 104.5mm 서산 7. 17. 1시간 114.9mm
7. 16.~20. 전체	사망·실종 24명, 부상 33명
2026. 8.	거제 8. 17. 일강수량 654.3mm(기상청 기준 관측 이래 전국 3위), 시간당 124.5mm 통영 산양읍·봉평동 특별재난지역 선포(8. 21.) 보성 8. 30. 시간당 124.6mm

※ 기상청 관측기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 행정안전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8 / 29

I. 재난, 무엇이 달라졌는가 6. 국내 호우 피해



국내 호우 피해, 2025년과 2026년

인명·재산피해와 특별재난지역

2025년

24명	사망·실종(7. 16.~20. 호우)
1조 848억 원	피해액. 최근 10년 단일 호우 1위
42곳	특별재난지역. 시군구 22, 읍면동 20
7. 16.~20. 호우로 사망·실종 24명, 부상 33명 여름철 전체 재산피해 1조 1,307억 원. 최근 5년 평균의 1.8배	

2026년

654.3mm	8. 17. 거제 일강수량. 기상청 기준 관측 이래 전국 3위
2회	특별재난지역 선포. 8. 7. 안동·의성 4개 면, 8. 21. 거제 전역·통영 2개 읍면동
조사 중	피해액. 중앙합동조사 8. 29.~
8. 15.~18. 남해안 호우, 거제 사망 1명 8. 28.~9. 1. 호우·강풍으로 사망 3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2025년 확정, 2026년 사건별 잠정) / 행정안전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 기상청 관측기록

9 /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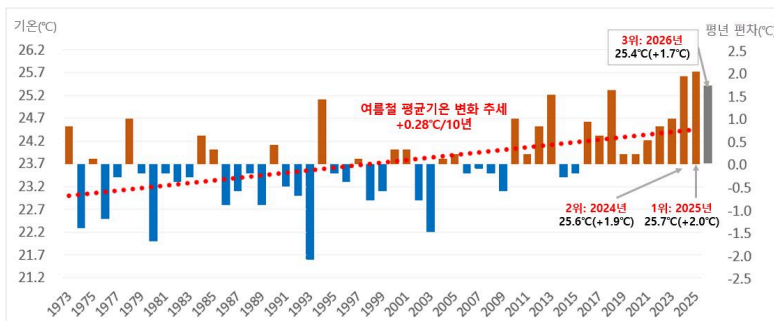
슬라이드 10 / 29

I. 재난, 무엇이 달라졌는가 7. 폭염의 기록



폭염의 기록

2025년과 2026년 여름철 기온



여름철(6~8월) 전국 평균기온 변화 추세(1973~2026). 자료: 기상청 「2026년 여름철 기후특성」(2026. 9. 3.)

시기	기록
2025년	여름철 평균기온 25.7도 역대 1위 (평년 대비 +2.0도)
2026년	양산 42.5도(8. 2.), 국내 관측 이래 최고(종전 홍천 41.0도) 여름철 평균기온 25.4도 역대 3위, 열대야 18.2일 역대 2위, 폭염일수 21.5일 첫 폭염중대경보 7. 12. 포항·경산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 8. 2.

※ 기상청 관측기록 및 「2026년 여름철 기후특성」 / 행정안전부 폭염 중대본 운영

10 / 29

I. 재난, 무엇이 달라졌는가 8. 국내 폭염 피해



국내 폭염 피해, 온열질환의 기록

2018년부터 2026년까지

2018년 온열질환 4,526명 사망 48명 폭염일수 31.0일 역대 1위	2024년 온열질환 3,704명 사망 34명 폭염일수 30.1일 역대 2위, 열대야 24.5일 역대 1위	2025년 온열질환 4,460명 사망 29명, 전년 대비 14.7% 감소 여름철 평균기온 25.7도 역대 1위, 온열질환자 감시 이래 2위	2026년, 9. 2. 기준 잠정 온열질환 3,986명 추정사망 34명 양산 42.5도(8. 2.), 국내 관측 이래 최고(종전 홍천 41.0도) 여름철 평균기온 25.4도 역대 3위, 열대야 18.2일 역대 2위
--	---	--	---

2026년 대응

6. 1. 폭염특보 개편. 폭염중대경보·열대야주의보 신설, 특보구역 183개에서 235개로 세분화
8. 2.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

※ 온열질환은 질병관리청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기준(추정사망 포함, 전수 통계 아님), 2026년은 9. 2. 기준 잠정 / 기상청 관측기록

11 / 29



II

국가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예방과 대비, 대응과 복구의 네 단계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각 단계마다 기구와 계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II. 국가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1. 재난관리 4단계



재난관리의 네 단계와 법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Prevention 예방 재난 발생 위험을 평상시에 줄이는 활동 국가핵심기반 관리(제26조의2) 종사자 교육(제29조의2)	Preparedness 대비 재난 상황에서 수행할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활동 재난관리자원 비축(제34조) 재난안전통신망(제34조의8)	Response 대응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하는 활동 재난사태 선포(제36조), 응급조치(제37조) 대피명령(제40조), 긴급구조(제51조)	Recovery 복구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활동 특별재난지역 선포(제60조) 국고보조 지원(제66조)
--	--	--	---

13 / 29

슬라이드 14 / 29

II. 국가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2. 재난안전 관리기구



재난안전 관리기구, 중앙

의사결정·자문 기구와 수습 기구

구분	의사결정 및 자문 기구	수습 기구
중앙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안전정책조정위원회(행정안전부장관) 실무위원회(재난안전관리본부장)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각 부처의 장관) 중앙긴급구조통제단(단장 소방청장)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총괄·조정하고(제14조제1항), 관계 기관에 행정·재정상 조치와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1항)

법정부 통합대응

법정부 통합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재난에서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14 / 29

II. 국가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3. 국가 재난관리 체계



국가 재난관리 체계

총괄·조정, 수습, 긴급구조, 조사·지원

총괄·조정	수습	긴급구조	조사·지원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단장 소방청장	중앙수습지원단 대규모재난 수습 지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중앙사고수습본부 주관기관의 장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단장 소방본부장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재난피해 상황 조사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지사	시·군·구 통제단 단장 소방서장	지방합동조사단 지역 피해조사
실무위원회 위원장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시·군·구 대책본부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 현장지휘소 현장지휘관	재난원인조사단 원인 규명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부단체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15 / 29

슬라이드 16 / 29

II. 국가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4. 제도의 변천



재난관련 조직과 법령의 변천

1948년부터 2017년까지

1948	1962	1991	1998	2004	2014	2017
내무부	건설부	내무부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국민안전처	행정안전부

법령의 변천

풍수해대책법(1967년) 자연재해 위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이어집니다

재난관리법(1995년) 인적재난 위주.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가 계기였습니다

기본법 제정(2004년) 재난관리법을 폐지하고 통합 기본법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기본법 개정(2014년, 2016년)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용어와 범위의 변화

1995년 이전 인적요인에 의한 피해에만 재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2014년 이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모두 재난으로 통칭합니다

계기가 된 재난: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태풍 루사(2002년), 대구지하철 화재(2003년), 세월호 사고(2014년), 코로나 19(2020년)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제도 연혁

16 / 29

III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

극한기후에 대비한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 10월 2일 마련하였습니다.



17 / 29

슬라이드 18 / 29

III.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 1. 추진배경과 비전

왜 종합대책을 만들었는가

추진배경과 비전

- 기후위기로 극한호우와 폭염, 가뭄, 대설 등 **예측을 뛰어넘는 기상현상**이 빈번해졌습니다
- 예외적 현상이 아닌 일상화된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자연재난 대비·대응체계 전반 전환 필요

국내 사례

호우	'25년 여름철(6~8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으나 좁은 구역에서 단기간에 강한 호우 가 내리는 경향 * 7월 17일 서산, 산청, 광주 지역에서 7월 1시간최다강수량 극값 경신
가뭄	강릉 가뭄에 대해 최초로 자연재난 재난사태 선포 (8.30)
폭염	'25년 여름철(6~8월) 평균기온 역대 1위(25.7°C)
대설	'24.11월 수도권 폭설로 수원 일신적설 역대 1위

기본방향

물적기반	정보기술	통합대응
기후탄력형 물적기반 확충을 통한 자연재난 대비 강화	+	AI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 및 대응 고도화
		+
		극한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범정부 통합대응체계 전환

※ 관계부처 합동, 「극한기후에 대비한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 2025. 10. 2., 1쪽·4쪽

18 / 29

III.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 2. 추진전략 1



추진전략 1. 기후탄력형 물적기반 확충

설계기준 전환, 노후시설 보강



1,350km

정밀조사로 결함이 확인된 노후 하수관로, 우선 교체·보수(2030년까지)

210개소에서 270개소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확대, 하수환경 확대와 펌프장 집중 설치

15cm에서 5cm 이하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작동기준 강화

과거 기준에 맞춘 설계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준으로 바꾸고, 결함이 확인된 관로와 피해 이력이 있는 제방부터 보수·보강에 착수합니다.

※ 관계부처 합동,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 2025. 10. 2. 하수관로는 8쪽과 별첨 85쪽, 중점관리지역은 11쪽, 진입차단시설은 14쪽

19 / 29

슬라이드 20 / 29

III.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 3. 추진전략 2



추진전략 2. AI 기반 재난 예측·대응 강화

원문 19쪽부터 21쪽



기상예보 수치모델 해상도를 8km에서 3km로 높이고, 홍수 수위 예측 시간을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합니다. 수위관측소는 933개소에서 1,191개소로 늘리고 산악기상관측망을 확충합니다.

※ 관계부처 합동,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 2025. 10. 2. 수치모델 해상도는 19쪽, 홍수예측과 수위관측소는 20쪽, 산악기상관측망은 21쪽

20 / 29

III.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 4. 추진전략 3



추진전략 3. 국가통합대응체제 전환

중앙·지방·시민사회의 협력



(가칭)재난성호우 개념을 신설하고 긴급재난문자를 별도로 두어 선제적 주민대피를 유도합니다.

※ 관계부처 합동,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 2025. 10. 2. (가칭)재난성호우 기준(안) 29쪽, 긴급재난문자와 대피명령 30쪽, 주민대피지원단 36쪽

21 / 29



IV

2026년 재난관리 추진계획

IV. 2026년 재난관리 추진계획 기본방향 1



국민 안전권의 실질적 보장

생명존중사회 구현 초석 마련

- (안전권 명문화) 「생명안전기본법」이 법률 제21729호로 2026년 6월 2일 공포되어 12월 3일 시행합니다
- (이행력 강화)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대통령령 제36319호로 5월 12일 설치되어 7월 28일 출범하였습니다

시행 일정

2026. 5. 12.

■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7. 28. 출범

2026. 12. 3.

■
법 본체 시행

2027. 6. 3.

■
종합계획·안전지수·
사고조사위원회 조항 시행

무엇이 달라지는가

지금까지 안전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였습니다.



안전권이 명문화되면 안전은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 생명안전기본법(법률 제21729호) / 대통령령 제36319호

23 / 29

IV. 2026년 재난관리 추진계획 기본방향 1



사회재난 예방·안전 관리 체계 혁신

- (법률 제정) 도시 과밀화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 등 사회재난의 위험성에 맞는 정부 역할과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재난대책법」을 제정합니다('26년)
- (예방·대비 강화) 고위험 지역과 시설에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시기별로 사고 발생 전 책임기관의 의무를 확대합니다
- (위험요소 제거) 국가핵심기반시설을 민간위탁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종합 관리합니다

지금까지

사후 대응 중심

사고가 난 뒤에
책임을 묻는
구조였습니다



앞으로

사전 의무 중심

사고 발생 전에 책임기관이
이행할 의무를 법으로 정하고
시기별로 확인합니다

범위

국가핵심기반 확대

지정 범위를
민간위탁기관 등으로
넓힙니다

※ 행정안전부, 2026년 재난안전관리 추진계획

24 / 29

IV. 2026년 재난관리 추진계획 기본방향 1



재난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자격, 인증, 자원, 인력

- **(전문자격 도입)** 「재해영향평가법」 제정 후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을 신설하고('26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의 기반을 마련합니다('28년 본격 도입)
- **(안전관리 강화)** 기업 재난관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증평가단 전문인력을 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며, 시설물 안전점검을 고도화합니다('26.上)
- **(자원 통합관리)** AI 기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검증된 국가재난관리 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운송에 협업합니다('26년~)
- **(재난조직 역량)** 지방정부 재난안전 부서장 대면 교육을 강화하고, 재난안전상황실과 행정복지센터 등 일선 현장 인력을 확충합니다('26년 715명 예정)

자격제도 도입 일정

'26년

재해영향평가사
자격 신설

'28년

공인재난관리사
본격 도입

인증평가단 전문인력 확대

5 명

현재

30 명

확대

일선 현장 인력

715명

2026년 일선 현장
인력 확충

※ 행정안전부, 2026년 재난안전관리 추진계획

25 / 29

IV. 2026년 재난관리 추진계획 기본방향 3



AI·CCTV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

- **(실시간 위험관리)** 드론 취득 정보를 중앙과 지방 상황실에 실시간 연계하고(4개 시·도, '26년~), 위험상황 탐지 AI를 개발하여 민간에 제공합니다
- **(맞춤형 정보)** 개별 재난·안전 시스템을 국민안전24로 일원화하고('26년), AI로 사용자 위치를 인식하여 기상특보와 대피소 정보를 전달합니다
- **(데이터 통합)** 위성과 드론, CCTV의 정합 영상과 위치기반 재난상황 AI 자료 등 재난안전데이터를 표준화하고('26년, 77억 원) 공유플랫폼으로 통합합니다

데이터 통합

위성

드론

CCTV

표준화

공유플랫폼

맞춤형 정보

국민안전24

4개 시·도

드론 정보 중앙-지방 상황실
실시간 연계

5개에서 1개로

개별 재난·안전 시스템을
국민안전24로 일원화

77억 원

2026년 재난안전데이터
표준화 예산

1,800여 개

공유플랫폼 연계 데이터.
56개 기관

※ 행정안전부, 2026년 재난안전관리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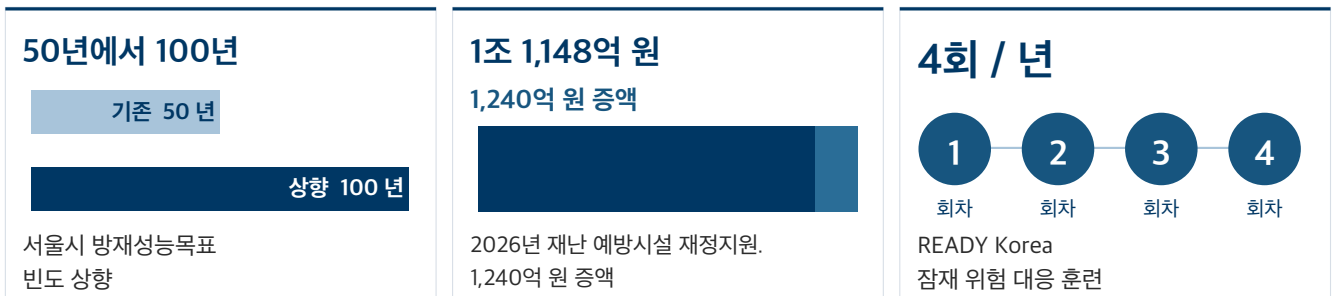
26 / 29

IV. 2026년 재난관리 추진계획 기본방향 3



극한기후 대비 예방 역량 강화

- **(방재성능 향상)**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상향하고, 자연재난 예방·복구 시설의 방재지침을 통합합니다('26년)
- **(투자 확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풍수해 생활권과 급경사지 정비 등 재난 예방시설 재정지원을 확대합니다
- **(실전 대비)** 지반침하 등 신설 유형의 매뉴얼을 마련하고('26.上), READY Korea를 연 4회 실시합니다



※ 행정안전부, 2026년 재난안전관리 추진계획

27 / 29

IV. 2026년 재난관리 추진계획 기본방향 3



국민 안전 우선 대응체계 구축

재난문자, 주민대피, 유형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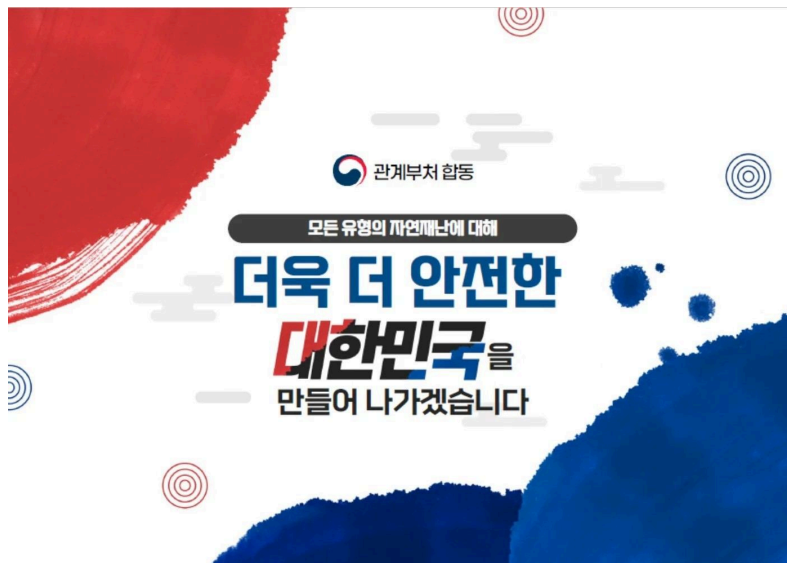
- **(재난문자 보완)** 중복 송출 방지 서비스를 도입하고(시범 부산·세종 '26.上, 전국 확대 '26.下), 글자 수를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합니다('26.下)
- **(신속 대피)** 주민대피지원단을 전 시·군·구로 확대하고(현재 185개), 민방위 사이렌을 재난 경보까지 확대하며, 주민대피 표준지침을 제정합니다('26.下)
- **(유형별 집중 관리)** 호우와 대설 취약지역·시설을 중점 관리하고, 폭염과 한파 쉼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며, 초고속 산불 주민대피체계를 고도화합니다('26년~)



※ 행정안전부, 2026년 재난안전관리 추진계획

28 / 29

V. 맺음 마무리

**감사합니다**

29 / 29

2026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 창립 발대식 및 제1회 학술세미나 발제 1

소방·재난, 행정이 먼저 움직인다

AI로 더 신속하게, 더 정확하게

 2026. 9. 18. 원주시청 · 정정보 2026. 9. 17.
 사단법인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 박기관

좌우 방향키 또는 클릭으로 넘어갑니다

1 / 32

불이 나고, 물이 차오르고,
사람이 갇힙니다.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 빠른 판단입니다.
이 한 문장의 물음에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제공: 소방청
 2 / 32

발제의 출발점

기술은 이미 현장에 닿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관측은 정밀해졌고 예측은 빨라졌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놓치는 신호를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도입을 정하고, 예산을 세우고, 규정을 고치고, 사람이 익히는 일이 남습니다.

늦추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와 절차입니다

3 / 32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은 **칸막이**, 해법은 **분권과 다양**, 방법은 **AI**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한기후에 대비한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발제는 그 가운데 기관 간 협력체계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 | | | |
|----|----------------------|---|
| 첫째 | 칸막이의 비용 | 하나의 재난 앞에 여러 개의 지휘선이 서는 구조, 그 구조가 치르게 하는 대가 |
| 둘째 | 세계의 응답과 한국의 길 | 각국이 칸막이를 깨는 두 갈래 길, 그리고 분권이라는 한국의 선택지 |
| 셋째 | 도구로서의 AI | 행정 구조의 재설계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 도구, AI 행정허브 모델의 제안 |

4 / 32

첫째

칸막이의 비용

하나의 재난 앞에 여러 개의 지휘선이 서는 구조, 그 구조가 치르게 하는 대가

5 / 32

첫째, 칸막이의 비용

213시간

지난해 3월 경남 산청 산불의 주불 진화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의성에서 시작된 불은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번져 149시간을 끌었습니다.

6 / 32

첫째, 칸막이의 비용

한 계절의 불이 한 세대의 터전을 삼켰습니다

주불 진화까지 걸린 시간 (2025. 3. 영남권 산불)

213시간



산청 산불

149시간



의성발 산불

※ 피해면적·주택·인명·피해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확정 집계 (2025. 5. 2.)
※ 역대 최대 여부: 산림청 산불통계(1986년 이래)

산림 약 10만 4천 헥타르

서울 면적의 1.7배, 1986년 산불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주택 3,848동, 사망 27명

진화대원 3명·공무원 1명은 별도 집계. 피해액은 1조 818억 원에 이릅니다

대책이 없어서 당한 참사가 아닙니다

참사 이전까지 역대 정부는 큰 재난마다 중앙 주도의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7 / 32

한국의 불, 두 개의 지휘부

한국의 불, 두 개의 지휘부,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한국의 불, 두 개의 지휘부,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한국의 불, 두 개의 지휘부,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는 산불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의 대응체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는 문구이다.

한국의 불, 두 개의 지휘부,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는 산불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의 대응체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는 문구이다.

한국의 불, 두 개의 지휘부,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는 산불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의 대응체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는 문구이다.

한국의 불, 두 개의 지휘부,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는 산불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의 대응체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는 문구이다.

한국의 불, 두 개의 지휘부,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는 산불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의 대응체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는 문구이다.

한국의 불, 두 개의 지휘부,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는 산불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의 대응체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는 문구이다.

한국의 불, 두 개의 지휘부,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는 산불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의 대응체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는 문구이다.

한국의 불, 두 개의 지휘부,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는 산불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의 대응체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는 문구이다.

한국의 불, 두 개의 지휘부,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는 산불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의 대응체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는 문구이다.

한국의 불, 두 개의 지휘부,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는 산불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의 대응체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는 문구이다.

한국의 불, 두 개의 지휘부,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는 산불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의 대응체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는 문구이다.

한국의 불, 두 개의 지휘부,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는 산불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의 대응체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는 문구이다.

한국의 불, 두 개의 지휘부,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는 산불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의 대응체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는 문구이다.

한국의 불, 두 개의 지휘부,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는 산불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의 대응체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는 문구이다.

한국의 불, 두 개의 지휘부,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는 산불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의 대응체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는 문구이다.

한국의 불, 두 개의 지휘부,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는 산불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의 대응체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는 문구이다.

한국의 불, 두 개의 지휘부,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는 산불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의 대응체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는 문구이다.

한국의 불, 두 개의 지휘부,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는 산불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의 대응체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는 문구이다.

한국의 불, 두 개의 지휘부,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는 산불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의 대응체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는 문구이다.

한국의 불, 두 개의 지휘부,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는 산불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의 대응체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는 문구이다.

한국의 불, 두 개의 지휘부,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는 산불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의 대응체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는 문구이다.

한국의 불, 두 개의 지휘부,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는 산불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의 대응체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는 문구이다.

첫째, 칸막이의 비용

"하나의 불을 놓고 소속 부처가 다른 두 조직과 단체장이 각자의 지휘선을 세우는 셈이다"

산림재난방지법의 통합지휘본부와 재난안전법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그리고 소방의 긴급구조통제단이 같은 현장에 섭니다.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이고,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 박기관, 『하나의 불, 두 개의 지휘부,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미간행 원고, 2026

※ 통합지휘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4조(법률 제20751호, 2026. 2. 1. 시행)

발제자 특별기고 원고 1면

8 / 32

첫째, 칸막이의 비용

같은 목표가 이미 문서에 있었습니다

"전략2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 관계부처 합동,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2023. 1. 27.

"제도는 거둬 손질되는데
현장 작동성의 문제는 반복되어 왔다"

※ 박기관, 같은 기고, 2026

참사 두 해 전에 이미 「현장 작동」을 국가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문서가 없어서가 아니라, 구조가 그대로여서 반복된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종합대책이 지자체 재난조직 모델과 읍면동장 대피명령 권한까지 내려간 것은
그래서 앞선 대책들과 다른 시도입니다. 오늘 발제는 그 다음을 말씀드립니다.

9 / 32

슬라이드 10 / 32

첫째, 칸막이의 비용

"산림청, 소방청,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통합 지휘체계를 운영하며 산불 발생 시 일사천리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2025. 11. 6.

문제의식은 국정위 최고 수준에 이미 올라 있습니다.
남은 것은 누가, 어떤 구조로 그 일을 하느냐입니다.

10 /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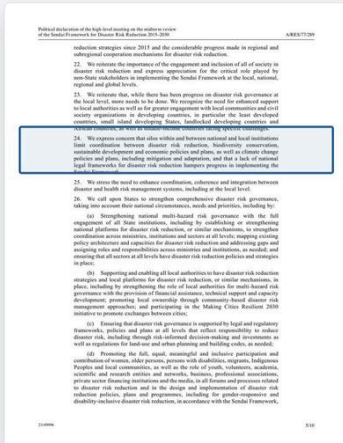
둘째

세계의 응답과 한국의 길

각국이 칸막이를 깨는 두 갈래 길, 그리고 분권이라는 한국의 선택지

11 / 32

슬라이드 12 / 32



유엔총회 결의 A/RES/77/289 원문 5쪽

둘째, 세계의 응답과 한국의 길

"국가·지방 기관의 내부와 기관 사이의 칸막이(silos)가 재난위험경감과 개발·경제·기후 정책 사이의 조정을 제약한다"

"We express concern that silos within and between national and local institutions limit coordination between disaster risk reduction, biodiversity conserv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conomic policies and plans, as well as climate change policies and plans"

※ 유엔총회 결의 A/RES/77/289, 샌다이프레임워크 중간평가 정치선언 제24항, 2023. 5. 18. 채택

12 / 32

둘째, 세계의 응답과 한국의 길

일본은 위로 모았습니다

방재청 설치법이 올해 7월 참의원을 통과해 11월 발족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리가 조직의 수장을 맡고, 전임 방재대신을 두며, 정원 352명(정부 정원심사 기준)으로 출발합니다.
방재대신에게 각 부처에 대한 권고권을 주고, 각 부처에 존중 의무를 지웠습니다.

부처 위에 조정 권한을 세워 칸막이를 넘는 길입니다

※ 방재청설치법 2026. 7. 13. 참의원 가결·성립, 지지통신 보도 기준, 발족 전이므로 창설 원료가 아닙니다

13 / 32

슬라이드 14 / 32

둘째, 세계의 응답과 한국의 길

미국은 아래로 내리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은 지역이 실행하고, 주 또는 부족정부가 관리하며,
연방이 지원한다"

"locally executed, state or tribally managed, and federally supported"

미국 대통령 직속 FEMA 검토심의회는 올해 5월 최종보고서에서 재난 대응과 복구의
운영·재정 책임을 주와 지방정부로 더 크게 옮기라고 권고했습니다.

※ FEMA Review Council 최종보고서, 2026. 5. 7., 5쪽. 전미도시연맹(NLC)·초당파정책센터(BPC) 정리 병행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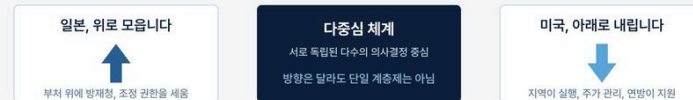
14 / 32

둘째, 세계의 응답과 한국의 길

행정학은 오래전에 답을 적어 두었습니다

"다중심이란 서로 공식적으로 독립된
다수의 의사결정 중심을 뜻한다"

"Polycentric" connotes many centers of decision making that are formally independent of each other"
Ostrom, V., Tiebout, C. M. & Warren, R., 1961 · E. Ostrom 노벨강연문(2009) 재인용



1961년 **빈센트 오스트롬**이 대도시권 행정을 놓고 제시한 **다중심 체계(polycentricity)** 개념입니다.

뒷날 **엘리너 오스트롬**이 이를 이론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위로 모으는 일본과 아래로 내리는 미국, 방향은 달라도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단일 계층제로는 복합재난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재난 분야 적용은 Djalante et al.(2011),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Science 참조

52 |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행안부)

□ 과제목표

- 국가-지방 및 광역-기초간 협력 체계 구축, 지방자치권 강화 및 주민 자치 활성화, 국가사무 지방이양 등으로 분권 역량 확대

□ 주요내용

-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지역 관련 최고위사관장기구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국가자치분권위원회 개편하고 개편을 계기로 현행상 기구도 적당
- (자치입법권 강화)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행정규칙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개편을 계기로 독립된 자치입법권 보장
-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최최후법에 대한 주민 참여 등을 확대하여 지방의회와 역량-책임성 강화
- (주민자치권 확대) 주민자치회 설치, 주민소환제 개선,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중립제외 의원 등 공무원 민주주의 강화
- (광역이양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지역별 맞춤형 권한이양 등 추진

□ 기대효과

-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통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 정책 시행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주민-지역 주도의 분권정책 추진으로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치성과 다양성을 실현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원문, 과제 52

둘째, 세계의 응답과 한국의 길

국정과제가 이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국가사무 지방이양 등으로 **분권 역량 확대**"가 과제의 목표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가칭)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이
주요내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국정52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행안부), 2025. 9. 16. 국무회의 확정
※ 국정49는 3특(제주·전북·강원)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정53은 국세 대 지방세 7:3을 명시합니다

분권은 재난 앞에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조건입니다

17 / 32

슬라이드 18 / 32

둘째, 세계의 응답과 한국의 길

한국의 길은 분권입니다

"권한 없는 책임은 복지부동을 낳고,
책임 없는 권한은 혼선을 낳는다"

중앙이 기획하고 지방이 집행하는 하향식 관리체계는 현장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중앙이 틀어쥔 재난관리를 현장이 움직이는 재난관리로 바꾸어야 합니다.

분권은 통합의 반대가 아닙니다.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통합대응의 조건입니다.

※ 박기관, 같은 기고, 2026

18 / 32

발제자가 걸어온 연구의 계보

오늘의 세 눈자는 이 20년 연구의 결론입니다

2006	도농통합의 성과평가: 원주시 10년의 통합효과 , 지방행정연구 20(3) 발제자가 바로 이 도시, 원주의 통합 효과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2008	직무만족-조직몰입의 결정요인: 지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 지방행정연구 22(2) 발제자의 최다 피인용 연구, KCI 피인용 184회(2026. 9. 17. 기준)
2009	로컬거버넌스의 실험과 정책과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시민사회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방정부 정책과정의 의제로 제기
2012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위한 기능배분 평가와 과제 , 한국정책연구 12(2)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효율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2014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평가와 성공적 추진전략 , 한국정책연구 14(1) "지방자치의 내실화와 항구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확보가 선행과제이다"
2021	창원시 소방사무 시범실시 성과평가와 소방조직체계 연구 ,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발표 사무이양의 눈으로 소방조직을 설계한 연구, 소방행정학회와 공저
2026	지방정부의 AI 행정허브모델이론 정립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자치연구 28(1) 본인 연구 20년의 결론을 AI 시대의 행정 구조 설계로 잇습니다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재 서지 기준

19 / 32

역할을 다시 배분해야 합니다

축소가 아니라 재정립입니다. 각자 가장 잘하는 일을 맡는 것입니다

예방·대비·복구	산림청, 예방·대비·복구의 주관으로 숲의 구조와 생리를 아는 기관이 대응 이전과 이후의 총괄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진화	소방, 훈련된 전문 조직이 현장 작전으로 인명구조는 이미 소방의 법정 소관입니다. 옮겨야 할 것은 진화 하나입니다
주민 대피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아는 정부가 책임지고 분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읍면동장 대피명령 권한 부여가 정부의 올해 과제이고, 읍여름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같은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산불의 진화는 소방청, 주민대피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함"

※ 국회입법조사처, NARS 특별보고서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 2025. 6. 27.

※ 읍면동장 대피명령 권한 부여는 관계부처 합동, 「극한기후에 대비한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 2025. 10. 2., 30쪽. 시행은 행정안전부 여름철 대책, 2026. 5. 12.

20 / 32

둘째, 세계의 응답과 한국의 길

이양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물리적 분산을 넘어 의사결정권의 분권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무만 내려보내는 이양은 분권이 아닙니다. 사람과 돈과 데이터가 함께 가야 합니다.
유엔도 지방정부에 재정지원, 기술지원, 역량개발을 제공해 다중재해 위험 거버넌스의 역할을 강화하라고 각국에 요청했습니다.

이양을 받는 지방정부의 사람 문제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발제자의 최다 피인용 연구가
지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다룬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 박기관, 자치분권포럼 발표, 2025 / 유엔총회 결의 A/RES/77/289 제26항(b) / 지방행정연구 22(2), 2008

21 / 32

셋째

도구로서의 AI

행정 구조의 재설계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 도구, AI 행정허브 모델의 제안

22 / 32

셋째, 도구로서의 AI

"AI 전환은 기술 도입이 아니라 행정 구조의 재설계 문제입니다"

지방정부의 AI 전환이 더딘 이유는 기술 역량의 부족이 아니라,
행정 조직 구조가 AI를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AX특별위원회 발표, 2026. 2.

23 / 32

슬라이드 24 / 32

셋째, 도구로서의 AI

AI 행정허브 모델

지방정부를 플랫폼 허브로 삼아 시민, 부서, 민간을 연결하고 AI가 이를 매개합니다



※ 박기관, 「지방정부의 AI 행정허브모델이론 정립 및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28(1) pp.1~23, 2026.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서지

24 / 32

셋째, 도구로서의 AI

93.4%

강원도가 AI 당직원 도입 전 2년간 당직 통화 7,538건을 분석한 결과, 5분 안에 끝나는 단순·반복 민원의 비중입니다.
 강원도는 이를 근거로 2025년 AI 당직원을 도입했고, 원주시도 2026년 스마트 AI 당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의 실험, AI 전담 조직 신설, 건강보험 양대 기관이 함께 있는 데이터 입지.
실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제도적 기반입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25. 8. 12. / 원주시 행정국 시의회 업무보고, 2026. 7. 22. / 박기관, 한국지방자치연구 28(1), 2026, 9쪽. 바로 이 도시에서 오늘 학회가 창립합니다

25 / 32

셋째, 도구로서의 AI

결국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입니다

AI 허브 구축은 부서 간 데이터 공유, 권한 재배치,
규제의 유연한 조정이라는 정무적 결단을 의미합니다

데이터가 정비되지 않으면 AI 허브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고,
조직이 전환되지 않으면 데이터 전략은 실행될 수 없습니다.

※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AX특별위원회 발표 요지, 2026. 2.

26 / 32

8) 전략연구 지역 AX

(1) 비전 및 미션

"소 · 5급 3특 · 케어난 DKA, 장애인 지역, 화상·의 대환민국"을 목표로, 인공지능을 체계로 한 권역별 AX 전환을 추진하고 5급 3특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대한민국형 지역혁신 모델을 구현한다. AI시대에는 데이터 생산·활용 기반이 전국적으로 확산될수록 산업 전반의 회복력과 혁신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역량이 집중된 기존 구조를 넘어 지역별 분산·확장이 새로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지역에 분산된 산업·인재·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될수록 AI 서비스의 품질과 적용 범위가 넓어지며, 이는 중앙집중형 체제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관점

지역 "AI" 기반의 "지역 AX" 전환은 각 지역의 "D" (Decentralized Governance) (분권형 거버넌스) 확립, 즉 N (Networked Infrastructure)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즉 A (산업·사회 전반의 지능화 가속(Acceleration)), 즉 S (공

의 질과 영구 혁신 개선을 통해 지역 고유의 경쟁력과 자립 생태계를 회복하도록 뒷받침한다. 나아가 지역 간 연결성이 강화되면 디지털·AI 인프라가 전국의 네트워크로 확장되어, 단일 지역의 혁신이 아닌 '전국 단위의 동시 성장'이 가능해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형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전국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균형 있는 국가 성장 모델을 완성하고, 인공지능이 사람과 지역의 삶을 함께 변화시키는 AX 기반 지역혁신 체계를 구현한다.

(2) 행동계획

● 총 5개 과제별 구성

66 5급 3특 도시 회복 시스템도입을 위한 AI·융합 도시로 육성

66 5급 3특 권역별 성장연대의 기반 AX 혁신, 영토 조성

67 지역 산업을 지역 AX 활성화를 위한 산업 인프라 거점으로 탈바꿈

68 지역 인재를 활용한 지역 AX 기업 육성 및 지역 창업 역량 강화

69 수로 맞춤형 지역 AX 인재 양성 및 정주형 인재 순환 생태계 조성

~ 107 ~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원문, 전략분야 8 지역 AX

셋째, 도구로서의 AI

행동계획은 지역 AX의 첫 자리를
분권에 두었습니다

"D : Decentralized Governance (분권형 거버넌스) 확립"이 지역 AX 비전의 첫 요소입니다. 약 200쪽 문서 전체에서 분권이라는 낱말이 등장하는 유일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원문 107쪽,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2026. 2. 확정. 지역 AX 실행과제는 과제65~69의 5개입니다

셋째, 도구로서의 AI

흐름은 한 방향입니다

유엔·세계기상기구

모두를 위한 조기경보

2027년 말까지 지구상 모든 사람을 조기경보로 보호한다는 목표 아래 AI 실무그룹이 4대 축 전반에 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 Early Warnings for All, WMO, 2025

경제협력개발기구

중대위험 거버넌스 권고 개정

사회 전체적 접근을 권고 최상위에 올리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 조정과 지방 맞춤 지침을 명문화하는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 OECD/LEGAL/0405 개정 초안, 2026. 1~2월 공개협의, 개정 추진 중

대한민국

3특 육성과 강원의 자리

국정과제는 3특(제주·전북·강원)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명시했습니다.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를 강원에서 먼저 시행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국정49, 2025. 9.

창립하는 학회가 맡을 세 가지 연구

기조강연이 정책의 방향을 보여주셨다면, 학회는 작동의 구조를 연구하겠습니다

연구 1 **작동성의 규명** 경보가 작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지휘·조직 구조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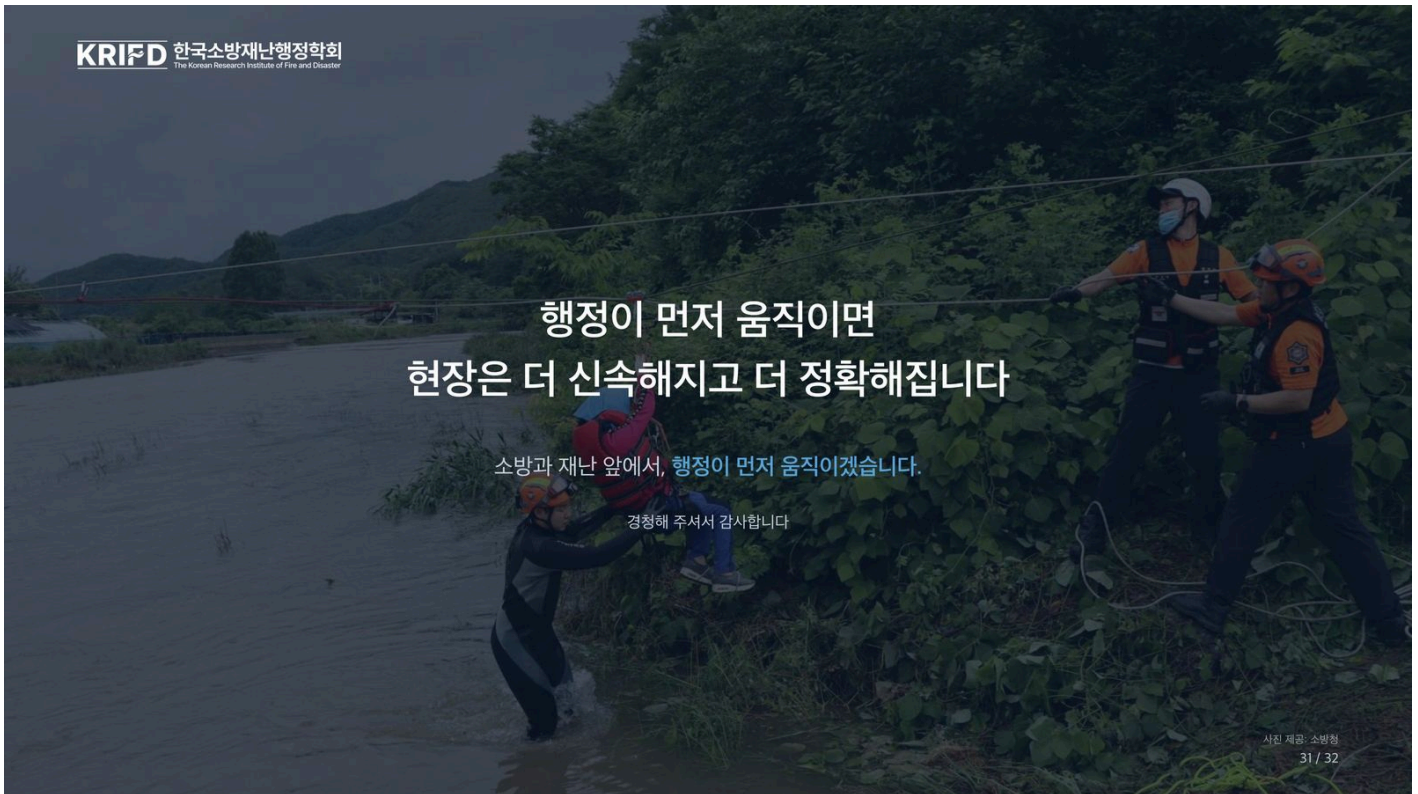
연구 2 **분권의 입법 설계** (가칭)제3차 지방일괄이양법과 사회재난대책법 등 제정 추진 법률에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기능배분의 조문 설계

연구 3 **AI 실증과 검증** AI 행정허브를 현장에서 실증하고, 원주에서 강원으로, 전국으로 검증을 확장

※ (가칭)제3차 지방일괄이양법은 국정52의 추진과제, 사회재난대책법 정부 제정안은 입법예고(2025. 12. 19.~2026. 1. 28.) 뒤 2026. 6. 18. 보류 상태(국민참여입법센터, 2026. 9. 17. 확인)

진단은 칸막이였고, 해법은 분권과 이양이며, 방법은 AI입니다

묻는 기준은 하나, 현장에서 작동하는가.
곧 실사구시입니다.



행정이 먼저 움직이면 현장은 더 신속해지고 더 정확해집니다

소방과 재난 앞에서, 행정이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 제공: 소방청
31 / 32

참고자료

박기관, 「하나의 불, 두 개의 지휘부,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미간행 원고, 2026

박기관, 「지방정부의 AI 행정허브모델이론 정립 및 적용에 관한 연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8권 제1호, 2026

강원특별자치도, 「전국 최초 대화 가능한 AI 당직원 도입」, 보도자료, 2025. 8. 12.

원주시 행정국, 시의회 업무보고 「스마트 AI(인공지능) 당직 시스템 도입」, 2026. 7. 22.

서용모·양기근·양영석·박기관·김한우, 「창원시의 소방사무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평가 및 효율적인 소방조직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21

금창호·박기관,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평가와 성공적 추진전략」, 한국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2014

금창호·박기관,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위한 기능배분 평가와 과제」, 한국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2012

박기관, 「로컬거버넌스의 실험과 정책과제: 지역사회 실천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3권 제1호, 2009

박기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2권 제2호, 2008

박기관, 「도농통합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원주시 10년의 통합효과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0권 제3호, 2006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원문, 국무조정실, 2025. 9. 16. 국무회의 확정

관계부처 합동, 「극한기후에 대비한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 2025. 10. 2.

행정안전부, 「여름철 인명피해 획기적 감축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운영」, 보도자료, 2026. 5. 12.

관계부처 합동,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2023. 1. 27.

국회입법조사처, NARS 특별보고서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 2025. 6. 27.

산림재난방지법(법률 제20751호, 2025. 1. 31. 제정, 2026. 2. 1. 시행) 제34조·제35조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2025. 11. 6.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원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2026. 2. 확정

유엔총회 결의 A/RES/77/289, 샌다이프레임워크 중간평가 정치선언, 2023. 5. 18.

OECD, 중대위험 거버넌스 권고(OECD/LEGAL/0405) 개정 초안, 2026. 1~2월 공개협의

일본 방재청설치법, 2026. 7. 13. 참의원 가결·성립, 지지통신 보도

FEMA Review Council 최종보고서(Final Report), 2026. 5. 7., 5쪽. 전미도시연맹·초당파정책센터 정리 병행 참조

Ostrom, V., Tiebout, C. M. & Warren, R., "The Organization of Government in Metropolitan Areas: A Theoretical Inqui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5(4), 831-842, 1961

Djalante, R., Holley, C. & Thomalla, F., "Adaptive Governance and Managing Resilience to Natural Hazards",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Science 2, 2011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 정기학술대회

재난위기 시대, 소방 조직의 과제와 전망



소방청 2026년 9월



OVERVIEW



발표 순서

재난위기 시대 소방조직 개편의 배경부터 기대효과까지 다섯 단계로 짚어봅니다

01

환경 변화

재난위기 시대, 소방 수요의 구조적 변화

02

현황 진단

지휘체계·조직 위상의 구조적 한계

03

4대 핵심과제

조직·지휘체계 개편의 4가지 실행방안

04

입법 과제

관련 법령 개정 로드맵

05

기대 효과

지휘력 강화와 국민 신뢰 회복

06

결론 및 제언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다음 단계

I. 환경 변화



재난위기 시대, 소방 수요의 변화

인구 구조 변화와 대조적으로, 재난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01

재난의 비감소성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재난 발생 건수와 피해규모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02

구급 수요 급증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며 노인 인구 관련 구급 출동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03

재난의 대형화



기후 위기로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통제 범위와 난이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소방 수요는 인구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인구는 줄어들이지만, 소방이 감당해야 할 위험의 총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II. 현황과 문제



현황 진단: 구조적 권한 불균형

시·도 소방본부는 재난 현장의 지휘 책임에 비해 제도적 권한이 부족합니다

ISSUE 01

지휘체계 불명확



긴급구조통제단장(본부장)의 직급이 경찰 등 지원기관장보다 낮아 현장에서의 원활한 지휘·조정이 어렵습니다.

지원기관

경찰청장 등 · 치안감/치안정감

지휘권자

소방본부장 · 소방준감/소방감

* 일부 시·도 기준

ISSUE 02

조직 위상의 한계



소방본부가 시·도의 '보조기관(부서)' 수준에 머물러 독립적 행정행위가 곤란하고 행정청 지위가 모호합니다.

지휘체계

시·도지사 → 부단체장 → 소방본부

법적 지위

단순 실·국 · 독립 행정청 지위 부재

“ 현재 소방본부는 책임에 비해 권한이 턱없이 부족한 구조입니다 ”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II. 핵심 문제

핵심 문제 정의

앞선 한계들은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3가지 핵심 문제로 귀결됩니다

01

지휘권 약화

직급 불균형으로 인한 현장 장악력 저하 및 지휘 체계 혼선 초래



02

기관 간 협력 한계

조직 위상의 차이로 인한 수평적 협력 관계 구축 및 조정의 어려움



03

재난 대응 일원화 부족

중앙·지방, 본부·소방서 간 유기적 연결 부족으로 통합 대응 역량 분산



“ 높은 수준의 지휘는 요구되지만, 권한은 부족한 구조입니다 ”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III. 개선방향

4대 핵심 과제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소방 조직 정상화를 위한 4가지 과제를 추진합니다



TASK 01

본부장 직급 상향

유관기관과 대등한 지휘력 확보를 위해 시·도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합니다.

인천 · 경기북부 · 제주



TASK 02

중간직제 도입

본부장과 과장 사이 지휘 공백 해소를 위해 국장급(소방준감) 중간관리자를 신설합니다.

지휘 단계 보강



TASK 03

조직 위상 재정립

시·도지사 '직속기관'으로 개편하여 소방행정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합니다.

독립 행정청 지위



TASK 04

제도개선

핵심 과제 실현을 위해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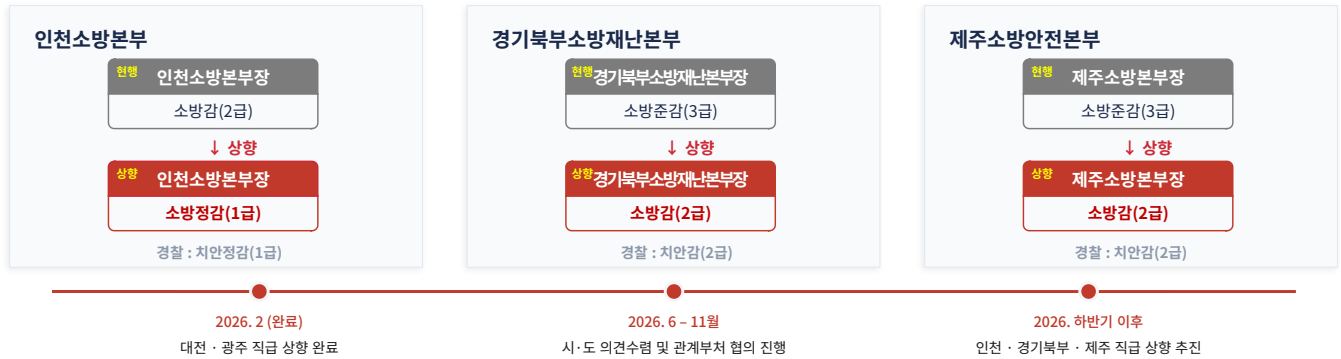
III-① 본부장 직급 상향



유관기관과 대등한 지휘력 확보

오송 지하철도 참사 등 대형 재난에서 드러난 지휘 공백을 직급 조정으로 해소합니다

일부 시·도 본부장의 직급이 유관기관(지방경찰청장 등) 대비 낮아 재난 현장 지휘력이 저하됩니다.



“ 재난현장의 지휘력은 대등한 권한에서 시작됩니다 ”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III-② 중간직제 신설



'본부장 - 과장' 지휘 공백 해소

1992년 광역체계 이후 업무량이 폭증했지만 중간관리자는 그대로입니다

소방공무원 **4.65배**소방서 **2.21배**구급 출동 **30.6배**구조 출동 **319.1배**

“ 지휘는 단계가 있어야 비로소 작동합니다 ”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III-③④ 조직 위상 재정립 · 명칭 변경



보조기관에서 직속기관으로

재난안전법상 지휘체계는 일원화되어 있으나, 조직상 보조기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 부서에서 기관으로, 집행에서 책임으로 ”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IV. 입법 과제



관련 법령 개정 로드맵

핵심 과제 실현을 위해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추진이 필요합니다

법령 구분	주요 개정 내용	세부 내용
소방기본법	직속기관화	소방본부의 법적 위상 격상
지자체 행정기구 규정	본부장 및 국장 직급 반영	소방본부장 직급조정(인천·경기북부·제주), 중간직급(국장급) 신설을 위한 기구 설치 및 직급 조정

부처 협의 필수 사항 원활한 입법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및 각 시·도와의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V. 기대 효과



변화를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

조직 개편은 지휘체계 정비를 넘어 국민 안전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01



재난 대응 일원화

중앙과 지방이 하나로

연결된 일사불란한

현장 대응체계 확립

02



지휘력 강화

본부장 직급 상향으로

유관기관과 대등한 협력과

실질적 지휘권 확보

03



기관 간 협력 강화

조직 위상 격상으로

지자체·타 기관과의

조정·협업 능력이 향상

“ 소방 조직의 일원화와 지휘체계 강화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VI. 결론 및 제언

소방은 지원 조직이 아니라, 재난 대응의 핵심 지휘기관입니다

권한과 책임, 조직 구조를 일치시키는 이번 개편은 재난 위기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합토론

좌장 김성호 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진행으로, 기조강연자와 발제자 3인, 토론자 4인이 함께 논의합니다.

토론자	직 함
김홍배	원주시 안전교통국장
최지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
박종혁	한경대학교 교수
전용한	상지대학교 소방공학과 교수, 원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종합토론 참여자



좌 장

김성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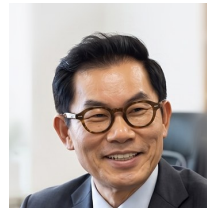
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기조강연

황범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국장



발제 1

박기관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장



발제 2

이인중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토 론

김홍배

원주시 안전교통국장



토 론

최지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토 론

박종혁

한경대학교 교수



토 론

전용한

상지대학교 소방공학과 교수

* 종합토론은 16:35부터 17:35까지 진행하며, 17:35부터 17:40까지 좌장이 논의를 정리합니다.

학회 소개

설립 목적

사단법인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는 소방과 재난 분야의 행정을 다루는 학술단체입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소방청의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정관에 정한 설립 목적은 소방·안전·재난 분야의 정책연구와 발표, 자료수집과 편찬입니다.

학회는 소방과 재난을 기술의 문제이기 이전에 행정의 문제로 봅니다. 관측과 예측의 성능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예측이 빨라져도, 그 예측을 누가 받아 무엇을 결정할지는 여전히 제도가 정합니다. 무엇을 들일지 정하고, 재원을 마련하고, 규정을 손보고, 기관 사이의 정보를 여는 일이 대응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병목은 기술이 아니라 행정에 있으며, 행정은 문제의 원인인 동시에 해결의 주체입니다.

이름에 소방을 남긴 것은 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화와 구조와 구급은 조직과 훈련과 권한으로 이루어지며, 그 자체가 행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소방을 재난의 한 항목으로 줄여 부르지 않으려 합니다.

일하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화재와 재난 대응의 기록을 모아 어느 단계에서 시간이 새는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둘째, 확인한 것을 법령과 조례, 예산과 지침의 언어로 옮겨 고쳐야 할 조문과 절차를 특정합니다. 셋째,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 소방기관, 학계가 한자리에서 정책과 사례를 나누도록 주선하고, 그 과정을 편찬하여 축적합니다. 논의가 문서에 머물지 않고 현장의 절차를 바꾸는 데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연혁

2024. 11. 14.	소방청 설립허가
2024. 12. 9.	법인 설립등기
2026. 9. 18.	창립 발대식 및 제1회 학술세미나

법인 현황

법인등록번호	110121-0141342
고유번호	629-82-00753
감독청	소방청
임원	등기 절차 진행 중, 2026. 9. 30. 확정 예정
주소	(0664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8길 13, 4층 402호
누리집	krifd.or.kr

판 권

발 간 물	사단법인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 창립 발대식 및 제1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발 행 일	2026. 9. 18.
발 행 처	사단법인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
발 행 인	박기관
편 집	총괄간사 김철현
주 소	(0664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8길 13, 4층 402호
전 화	010-4699-0614

※ 이 자료집에 실린 발표문의 저작권은 각 발표자에게 있습니다.
※ 사진 제공: 소방청, 원주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
학회 홈페이지
krifd.or.kr